

현대차 광주공장 설립 차질 빛나

합작법인 이사회 구성·경영책임 부담 등 과제 산적 광주시-현대차 협약 조인식 일정 연기 가능성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 형태로 광주에 조성되는 완성차 공장 관련 투자를 거의 확정 지었으나 광주시와 세부적인 내용 합의에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법인 이사회 구성, 경영 책임 부담, 현대차의 위탁 의뢰 대당 가격 등에서 여전히 의견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차로서는 당장 임금 하향 평준화와 고용 불안이 이유로 반대하는 노조와의 갈등을 해결해야 하고, 지자체에 자동차 생산을 위탁하는 것도 처음이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할 전망이다. 광주시 역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데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마련, 위탁 생산 방식의 수익 구조 정착, 기업적 마인드와

공공성을 동시에 가진 합작법인의 성공적 운영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19일 광주시와 합작법인 형식의 완성차 공장 설립을 위한 협약 조인식을 할 계획이었으나 경우에 따라 일정도 연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는 새 합작법인에 2대 주주로 참여해 전체 투자금액의 19%인 약 1300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이 공장에서 1000cc 미만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울산 공장 등에서 생산하지 않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신차다. 1000cc 미만이라 경차급이지만, 수요가 한정적인 경차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

고 차별화를 둘 수 있는 SUV 형태가 될 것이라는 게 현대차의 설명이다.

현대차는 최근 '레오니스'란 이름의 상표권 출원을 완료했다. 업계에서는 이 이름이 향후 광주 공장에서 생산할 소형 SUV의 모델명이 될 것이라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대차가 광주 공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결정한 이유는 현재 국내 다른 공장에서 생산중인 차종을 위탁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조는 연봉이 낮은 근로자에 대한 위탁생산으로 기존 조합원의 고용불안이 야기된다는 점을 들어 현재 생산 중인 차종이 아니어도 노사공동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자체와 자동차 대기업이 손잡고 위탁 생산하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기업 위탁과는 운영 방식이나 의사결정 구조 등이 달라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내놓은 모델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광주시와 현대차가 그 리스크를 떠안게 된다. 또 임금을 동종업계의 절반만 받기로 한 광주 공장 근로자들이 나중에는 생산성 등을 내세우며 업계와 같은 수준의 임금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와 광주시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감안, 합작법인을 구성하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와 대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합작법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시도"라며 "당연히 서로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설사 현재 의견 일치를 봤더라도 나중에 새로운 문제들이 돌출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공무원 10명중 1명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여성가족부 온라인 조사 "참고 넘어간다" 74.5%

광주·전남지역 시·군·구 공무원 10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3년간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건 발생 후에는 대부분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했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지역 구청 공무원 11.6%가 3년간 직접적인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지역 시·군 공무원 10.5%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11.1%였다.

피해 대부분은 언어적 성희롱(광주 9.3%, 전남 8.3%)과 신체적 성희롱(광주 5.0%, 전남 5.2%)이었다. 광주·전남 응답자의 0.4%는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26만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실시했으며, 조사 대상자의 41.3%인 10만8000명이 응답했다. 광주 응답률은 43.7%, 전남은 38.4%였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시·도별 피해 경험은 서울이 12.8%로 가장 높았고, 경기·충북(12.1%), 울산(11.9%), 인천(11.7%), 광주(11.6%), 부산(11.4%), 충북(11.2%) 등이 전국 평균(11.1%)을 웃돌았다. 제주(6.9%), 대구(8.5%), 대

전(8.9%), 강원(9.4%), 전북·경남(9.7%) 등은 낮은 편이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 2.8%, 여성 18.5%였다. 조사 결과, 지난 4월 발표한 중앙정부·광역단체·공공기관 종사자 피해 경험(6.8%)에 비해 기초단체 공무원의 피해가 4.3%포인트나 높았다. 이는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보다 기초단체의 조직문화가 성문제로 관련해 둔갑한다는 분석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대처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는 대답이 74.5%로 가장 많았다. '직장 내 동료나 선배에게 의논했다'는 응답이 19.6%였고, '직장 내 공식 기구를 통해 신고했다'는 3.9%에 불과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분위기를 깨거나 나쁜 사람인 사람이 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많았다.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도 기초단체가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보다 떨어졌다. '기관장과 고위직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노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사건처리에 대한 신뢰도' 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지난 공공부문 조사보다 1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응답자들은 직장 내 관행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성희롱 발언, 술자리 회식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각 시·군·구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수도권 위협' 北 장사정포 남북, 후방철수 논의 개시

남북 군사당국이 군사분계선(MDL)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핵·미사일 못지않게 수도권 위협하는 강력한 재래식 무기로 꼽히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빼낸다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 군사당국이 군사분계선(MDL)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6년 3월 보도한 북한군 훈련 모습. /연합뉴스

17일 북측의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장성급군사회담에서 MDL 인근에 배치된 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회담 의제로 올랐다. 남측은 4·27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를 이행하는 차원의 여러 안을 제안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로 북한 장사정포를 MDL에서 30~40km 후방으로 철수하는 안을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와 함께 장사정포의 후방 철수를 전쟁 위협의 실질적인 해소 대책으로 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접어둔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합의한 바 있다.

MDL 인근 북측지역에는 1000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중 사거리 54km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km의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330여 명이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3대 연합 훈련 중지...북 비핵화 합의 불이행때 재개

한·미 국방부 금주내 발표

한미 양국 국방부가 비핵화와 대북체제 안전보장 논의를 위한 북미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대북 전면전 가정 3대 훈련을 중지하되 대화 중단이나 북한의 관련 합의 불이행 때는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우선 "한미 군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단하겠다고

언급한 연합훈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금주 내 한미 국방부가 논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기간 실시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도발적이라고 언급한 대상은 대규모 전쟁을 상징한 '워게임'이라며 "따라서 전면전을 가정한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하는 3대 한미연합

훈련은 UFG 연습과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FE) 훈련이다.

그는 아울러 "한미가 대규모 연합훈련의 중단 혹은 연기를 발표하더라도 '스냅백'(snapback) 조항이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거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미연합훈련을 언제든 재개하는 조항이 발표 내용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 최근 5년간 사회재난 946명 사망

'재난안전 통계연보' 첫 발간

최근 5년간 광주에서 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946명이 사망했고 재산피해도 1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17일 "2017 광주재난안전 통계연보" (2016년 12월 31일 기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 관련 정보만을 모은 통계연보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보에 실린 최근 5년간 자연재난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광주에서 강풍·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재산피해 185억원과 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재산피해의 경우 유형별로는 태풍(176억원), 강풍(8억원), 대설(6600만원), 호우(500만원) 순으로 피해금액이 컸다.

인명 피해는 폭염 4명, 태풍 1명 등이다.

또 교통사고·화재·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재산피해 198억원과 사망자 946명이다.

이중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508명이고, 갑염병(342명), 화재(30명), 수난(28명), 추락(21명) 순이다.

통계연보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자연재난·사회재난·안전관리 등 유형별로 분산된 재난안전 관련 통계를 37개 분야로 종합해 담았다.

재난유형별 발생원인과 피해 상황,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안전관리 분야는 자살·범죄·구조·구급 등 발생 건수와 대상별·월별·연령별 등으로 구분해 수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썬그린에너지(주)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http://www.moc.go.kr>

2016년 9월 20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9.19일(월)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 태양광 + ESS에 REC 가중치 5.0 부여 -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 설치 대폭 확대